

종합

차기 광주은행장 선임 내달 중순 가닥

우리금융행추위 일정 확정, 내달 4일까지 접수...5~6명 거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면서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우리은행, 경남은행 행장 선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송기진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6명이 하마평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금융은 18일 우리은행장과 광주은행장, 경남은행장 등 자회사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개최해 행장 선임 일정을 확정했다.

행추위는 이팔성 회장과 우리금융 사외이사 2명, 외부인사 2명, 우리은행 사외이사 1명, 예금보험공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행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3개 행장 후보를 19일 신분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과 헤드헌터 추천을 받아 내달 4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를 접수받기로 했다. 지원자는 이력서를 포함한 경영계획서를 내야 한다.

행추위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행장 후보들을 가려 각 은행에 추천할 예정이다. 차기 행장들의 자

격기준은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 비전을 갖고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인물로 정했다.

차기 행장들은 내달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열리는 자체 은행 주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차기 행장들 선임에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의 의중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금융 대주주가 정부여서 우리은행장 등 자

회사의 행장 선임에도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현재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는 5~6명 가량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송기진 현 행장의 연임 가능성과 최승남·김경완 우리은행 부행장, 강경수 상근감사위원, 남경우 KB신물사장, 최영하 광주은행 전 상무, 박정규 우리신용정보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장에는 윤상구 우리금융 경영혁신 및 홍보 담당 전무와 김정환 리스크담당 전무, 이순우 우리은행 수석 부행장, 김희태 우리은행 중국법인장, 이병재 우리파이낸셜 사장, 김경동 전 우리금융 수석전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시설

자치구 간 '불균형' 주민 피해 양산한다

광주시 각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동구의 경우 당장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되고, 구청별로 사회복지 및 치안수요의 편중이 따라 주민들의 피해마저 가중되고 있다.

동구의 인구는 지난해 10월 말 현재 10만2782명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 한해 전체 인구의 4.8%에 달하는 5013명이 동구를 빠져 나갔다. 따라서 동구는 지난 18대 총선의 인구 하한선 10만4000명을 놓고 볼때 내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구청별 행정 및 복지 서비스 불균형은 이미 한계 수준이다. 동구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북구와의 편차는 더욱

심하다. 동구는 주민 1명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47만 원에 불과하지만 북구는 101만 원에 달한다. 반면 북구는 복지에 산이 전체의 64.9%를 차지하나 동구는 47.8%로 오히려 부담이 적다.

치안문제 역시 심각한 현명이다. 최근 2년 동안 북구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만7905건으로 가장 많고, 살인·강간 등 강력사건도 424건으로 압도적이다. 인구 편차에 따른 피해의 셈이다.

이제 자치구 간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구 간 경제조정이 우선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밀려난 화만 자초할 뿐이다.

광주시는 도시재생을 통한 인구 유인책 마련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언제까지 임시방편의 경제조정으로 때울 수는 없질 않는가.

“SSM 하루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줄여라”

전국 기초의회장들 촉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정기총회'에서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장을 무차별 잠식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하루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한 달에 3차례 이상 휴업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제를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해나간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과학벨트 광주유치 특별법 발의 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윤석, 조영택, 김재균, 김영진, 최인기, 강기정, 주승용, 김동철 의원. /연합뉴스

“예산 삭감한 사업 왜 하나” 윤봉근시의장, 姜시장 비판

광주시 “세계인권도시 포럼은 국제적 약속”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광주시의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과 관련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준태 광주시장을 비판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인권도시 포럼은 국제적인 약속”이라며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장은 18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지난해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3억원이 전신행정성 예산남비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혀 삭감됐는데 집행부가 며칠 전부터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시의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완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인데도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준태 시장은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다시 합법적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인권도시포럼 개최는 정부와 유엔본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인권 관계자와 약속한 것으로 ‘국제적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하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2개월 동안 보류하는 등 타결점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어 “2011세계인권도시 포럼 추진위원회는 최근 포럼행사를 일부 축소하고, 5·18기념재단과 한국인권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방침을 결정하기 전 일부 시의원에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도시 포럼은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ABC협회장에

김영일 전연합통신 사장

한국ABC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김영일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연세대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합동통신 위성팀 특파원, YTN 전무이사, 연합통신 사장, 국민일보 사장과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이주진 항공우주연구원장 사의

나로호 1·2차 발사를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주진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기초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7일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연구회는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자전 및 타진을 받아 3배수의 후보를 추리고 이사회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항우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연합뉴스



불교계 “세계인권포럼 지지” 대한 불교 조계종 광주·전남불교전법단은 18일 오후 광주 무각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과 UN 인권도시 지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

부산저축은행 불몽 목포 보해저축은행 번저

예금자 200여명 몰려 인출사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불몽이 목포 보해저축은행으로 튀기면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빚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인 5%에 못미치는 저축은행 명단을 17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보해저축은행이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 무안동 보해 저축은행 본점에는 18일 오전 예금자 200여 명이 몰려와 예금을 찾아가는 등 북새통을 이뤘으며 문의 전화도 빗발쳤다. 일부 예금자는 저축은행의 설명을 듣고 되돌아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전날에도 예금자들이 몰려 100억원 가량이 인출된 것으로 알

려졌다. 보해 저축은행은 “대주주인 보해양조씨가 최근 320억 이상 증자를 완료했고 추가로 외부 투자자들이 다음 달 초 740억원의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며 증자 완료 시 BIS 비율이 11%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에도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는 고객들이 최근 수차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예금자보호 제도 등을 잘 알고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다.

금융위는 작년 말 기준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70여곳 이상이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대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se@

“자율학습 단축·0교시 금지 사교육 광풍 조장하는 처사”

광주교육의원, 장휘국 교육감 ‘급진행정’ 우려

박인화 광주시교육의원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휘국 시교육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지만, 지난 3개월간의 행보에서 급진적 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며 장 교육감의 ‘급진행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시 교육청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심화반 운영과 0교시 수업 등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변화없는 교육현실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교육 광풍만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 행정에서도 ‘진정체제 구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 중심의 광주교육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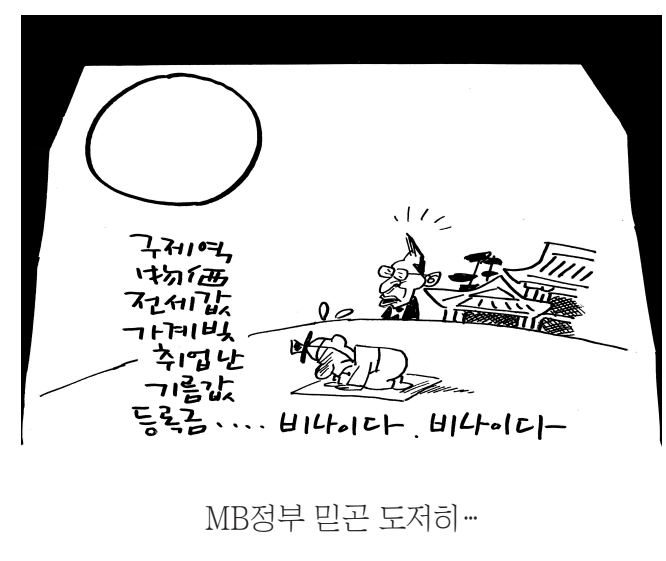
신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를 설치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 전횡을 휘둘러 내부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추진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특정단체 출신의 권요사 내정설과 혁신추진단의 조직 편입설 등이 확산되면서, 공조지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년 임기가 남아 있는 교육장을 동부교육장으로 전보해 ‘둘러막기’ 논란이 일었고 교육장의 인사, 예산, 감사에 대한 권한을 분청으로 집중함으로써 교육장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진보는, 권력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않고, 조직을 장악해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 것을, 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조직 장악을 통한 강력한 권력보다 소통의 명확, 열린 리더십이 개혁과 변화를 이루는데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00-6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6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